

야, 윤 ‘연초 개각 없다’ 선긋기에 “이상민 탄핵” 총공세

탄핵소추안 추진 재차 거론 “공직자로서 자격 이미 상실” 경찰 방패막이 수사도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재차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파면 등 문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선을 긋자 ‘탄핵 카드’를 미리 꺼내 들면서 대야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던 것과 이 장관이 여전히 버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 지도부도 일제히 가세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의 책임이 명백하다”면서 “국정조사 청문회(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이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위직 참사 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경으로 ‘꼬리 자르기’, ‘방패막이 수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도 심각하다.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범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달여간 수사를 방패 삼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모두 회피해왔다”며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은 행안장관과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면죄부만 쥐어준 셈”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종료가 사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한 열흘 이상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이 대표는 “집대축구식 뭉치를 부려온 여당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됐다”면서 “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존자와 유가족의 증언도 듣지 못하고 국정조사를 끝낼 수는 없다”며 “이들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추가 논의 예정”

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처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

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속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의 부속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

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내주 가동... ‘연동형 비례제’ 손질 공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내년 4월 총선 관련 룰 세팅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상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수 정개특위 위원장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상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나 지난번 선거에서 위상정당이 출현하게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이를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나 ‘실패한 실험’으로 귀결됐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상정당을 앞다퉀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만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 127석·광역비례대표 127석·전국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막상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도시와 농촌, 다선과 초선 등 현역 의원들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여야 모두 ‘내부 합외’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북 다시 영토 침범시 9·19합의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 길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